특별 기획

좌 담

화해와 협력의 새 시대 : 남북정상회담과 남북 경협

-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경제공동체 -

본 연구원은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지난 5월 9~10일의 이틀 동안 한국경제신문사와 공동으로 「화해와 협력의 새 시대 : 남북정상회담과 남북 경협」이란 대주제로 남북 관계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총 3 세션으로 나누어, 제1세션에서는 남북정상회담의 기대 효과와 남북 경협 활성화를 위한 과제, 제2세션에서는 기업의 대북 사업 진출 전략과 실천 방안, 제3세션에서는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경제공동체란 주제로 연구 논문 발표와 종합 토론이 있었다. 본 고에서는 제3세션에서의 발제 원고와 전문가 4 명의 토론 내용을 정리 · 요약하였다.

- 일 시 : 2000년 5월 10일 13:30~16:00
- 장 소 : 한국경제신문사 다산홀(18층)
- 발제 및 사회 : 장달중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 토 론 : 곽태환 (통일연구원 원장)
  김기환 (미디어밸리 회장, 前남북경제회담 수석대표)
  신영섭 (한국경제신문사 논설위원)
  안병준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가나다 順)

장달중: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한 달여 앞두고 현대경제연구원과 한국경제신문사가 매우 시의 적절하게 토론회를 마련한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의 주제는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경제공동체 입니다. 주제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사회자가 간단하게 기조 발제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자부터 먼저 발제 겸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통일 방안의 접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지난 50 년간 남북 관계는 남북한의 상호 제의와 대응 과정에서, 그 시작은 많은 기대와 설레임으로 이루어졌지만, 그 결과는 대개 상호 불신과 대립의 악순환으로 나타난 것이 일반적인 형태였습니다. 예컨대 1972년 7 · 4 남북공동성명과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은 남북한의 큰 기대와 전세계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지만, 그 결과는 남북 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보다 긴장과 대결의 경직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남북한간의 긴장과 대결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비책으로 거론되어온 것이 바로 남북정상회담이었습니다.

1994년 김영삼 정부 시절 남북정상회담이 합의되었지만 김일성의 사망으로 무산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정부 들어 이번에 남북정상회담이 합의되었습니다. 이것은 김대중 정부의 끈질긴 대북 포용 정책과 이에 대한 북한의 호응과 이해, 그리고 그것이 실리주의적이든 아니든간에 북한의 현실적 대응의 결과로 해석됩니다.

이제 우리 앞에 제기되는 주요 과제는 남북정상회담의 큰 상징적 의미를 어떻게 실질적인 평화 공존, 교류 협력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통일의 관계로 전환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남북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는 4 · 8 남북정상회담 합의서 정신에 따라 조국통일 3대원칙(자주 · 평화 · 민족대단결), 화해와 단합, 교류와 협력, 평화와 통일 등을 포괄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우선 주목되는 것은 김대중 대통령의 3단계 통일 방안과 북한의 연방제 통일 방안 사이에 접점이 모색될 가능성입니다. 우리 정부가 현재 어떤 준비와 접촉을 하고 있는지 알기 어렵지만, 양자간에 접점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자간의 접점이 모색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경우 남북 관계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둘째,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쉬운 것부터 해라, 간단한 것부터 해라, 너무 기대하지 말라고들 말하는데, 이것은 현실성이 부족한 듯합니다. 남북 두 정상이 만나면 군비 축소와 같은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논의는 아니더라도, 평화와 안전,

평화 공존에 대해 거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남북 관계에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평화 공존과 안전 문제입니다. 물론 주한 미군 문제나 평화협정 문제에 대한 남북한의 입장 차이가 너무 현저하기 때문에, 이들 문제에 대한 논의가 쉽지 않을 것이며, 평화 문제에 대해 실질적인 토의를 한다거나 어떤 합의를 본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이들 문제에 대해 앞으로 서로 논의할 수 있는 계기와 실마리는 어느 정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또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북 경제 지원은 우리 경제의 부담 능력을 고려해야

다음은 경제 협력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이산가족 문제와 연계되어 일정한 합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이산가족 재회 문제는, 물론 어떤 형태로든 물꼬가 트이겠지만, 북한체제의 안정성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까지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가장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역시 경제 협력 분야일 것이며, 정상회담에서 실질적이며 구체적인 가시적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제 교류 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와 같은 기구 설치는 정상회담에서 합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문제는 우리 정부가 밝힌 바 있는 대북 특수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에서 선언된 내용의 대북 경제 지원을 하려면 엄청난 재원이 필요합니다. 최근 골드만 삭스에서 정상회담 합의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산출한 자료를 보면, 북한 노동자들의 현재의 노동 생산성을 남한의 약 15% 수준으로 보고, 이것을 앞으로 10 년 안에 남한 노동 생산성의 50% 수준까지 끌어올리려면 약 8,300억 달러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연간 830억 달러의 대북 지원이 필요한 셈인데, 이 830억 달러는 우리나라 GDP의 약 17%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우리 경제가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구서독의 경우 통일 비용으로 GDP의 10%를 부담했지만, 고전을 변치 못했습니다. 골드만 삭스의 추산이 맞다면, 10 년간 GDP의 17%에 해당하는 돈을 부어 북한의 노동 생산성을 우리의 50%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것은 우리 경제에 엄청난 부담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독일의 경험에 비추어, 대북 경제 협력 문제는 우리 경제가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의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실현 가능한 것부터 점진적으로 추진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봅니다.

대통령이 대북 특수를 발표하고 난 이후, 정부 일각에서 대북 특수의 자금원을 제시한 바 있는데, 설득력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제시되고 있는 자금원 가운데 일본의 대북 경협 자금이나 대북 배상금은 장기간을 요하기 때문에 현실성이 부족합니다. 또 국제 금융 기관에 우리 정부가 보증을 서고 돈을 빌리는 방법도 제시되고 있지만, 현재 우리의 신용 등급이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자칫하다 우리 자신이 돈을 빌릴 수 없는 수준으로까지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의 합의는 우리 정부의 많은 노력의 결과이지만, 다른 한편 우리 국민이 받는 인상은 남북 관계 개선을 뭔가 돈으로 해결한다는 인상입니다. 이러한 것은 현실적으로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적대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있어 정치학에서 신기능주의 접근법이라는 것을 많이 이용합니다. 기능주의적 접근이란 대개 경제나 문화 부문에서부터 교류 협력을 시작해서 정치·군사 분야로 교류 협력을 확산해나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신기능주의적 접근은 이러한 기능주의적 교류 방식에 관심을 갖는 상대편의 정치 엘리트를 포섭함으로써 적대적 관계를 개선하는 접근법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방 외교가 보여주듯, 역시 돈입니다. 현재 남북 관계에서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가운데 하나가 돈에 의한 뒷거래입니다.

'전쟁이 없는 안전공동체'가 가능 중요한 과제

넷째, 남북정상회담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도덕과 원칙 문제들이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전체주의적 정권과의 교류에 있어서 우리가 지켜야 할 도덕적 원칙들이 국제 인권 단체나 국내 정치 세력으로부터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남북정상회담의 가장 우선적인 고려 사항은 그와 같은 도덕적인 문제보다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입니다. 때문에 얼마를 주고 얼마를 받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조금 뒤로 미루어두는 것이 현실적으로 옳지 않을까요? 언론 보도를 보면 대부분의 글들이 얼마를 양보하고 얼마를 받을 것인가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접근법은 이제 지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평화와 안전을 위한 상호 신뢰 회복에 대해 두 정상간에 의사 소통이 이루어진 다음에, 도덕이나 원칙과 같은 그러한 문제는 차선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선은 남북의 평화 공존과 공영이 도모될 수 있는 어떤 틀을 두 정상이 마련해주었으

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

이를 위해 두 가지 사항을 지적해두고 싶습니다. 첫째, 그동안 남북 관계는 제로 섬 게임적 관계였지만, 이제는 서로가 잘되는 포지티브 섬 관계나 윈윈 전략 관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준비는 상당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대중 정부의 포용 정책을 통해 남북 관계는 네거티브한 제로섬 적 관계에서 포지티브한 윈-윈 게임 형태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전쟁이 없는 안전공동체' (Non-War Security Community)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유럽의 경우 정치 · 경제적 통합 과정을 살펴보면, 그들은 우선 전쟁 없는 안전공동체를 만드는 데 주력했습니다.

둘째, 김영삼 정부의 대북 정책은 남북 관계의 국제화보다, 남북 관계의 당사자화 · 한반도화 · 민족화라는 차원에서 남북 관계는 당사자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는 남북 관계의 국제화이든 당사화이든 북한의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라면 어느 것이라도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병행해서 추진해왔습니다. 그런데 베를린 선언을 계기로 하여 남북 관계가 남북 당사자 관계로 변화되었다는 인상이 듭니다.

현실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로서는 고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북한과 미국이 수교하고 북한과 일본이 수교해서 관계가 개선되는데 남북 관계가 개선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정부의 대북 포용 정책은 국민의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베를린 선언을 통해 남북 당사자 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들고 나온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한반도 문제는 남북 당사자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국제적인 속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독일 내의 해결과 유럽 내의 해결이라고 하는 두 가지 문제를 놓고 고민해온 콜 총리의 對구동독 접근 방식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남북정상회담으로 한반도 문제가 남북 당사자 관계로 변화하는 인상을 주기 때문인지, 미국은 자신의 국제 전략적 차원에서 핵과 미사일 문제, 대량 살상 무기 문제를 남북정상회담에서 다루어줄 것을 우리측에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집중 거론하다 보면 정상회담 자체가 일그러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거론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주요 과제의 하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어떤 형태로든 남북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만일 돌파구

가 마련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과거와 같은 결렬과 긴장의 악순환으로 되돌아갈 것이 아니라 점차적인 교류의 디딤돌이라도 마련하였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일 것입니다.

사회자의 기조 발제와 토론은 이 정도로 하고, 그러면 지금부터 차례대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일연구원의 곽태환 원장부터 정부의 정책을 포함해서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곽태환: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부나 통일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니라 토론자 개인의 견해임을 먼저 분명하게 밝혀두고자 합니다. 우선 이번 정상회담에서 평화조약 체결 같은 것은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광범한 주제를 놓고 포괄적으로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사항을 남북공동성명서에 포함시키고, 그 후속 조치로서 2차, 3차의 정상회담의 길을 열어 놓고 실무팀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4자회담을 통해 평화협정을

한반도의 평화 구상은 정부의 대북 정책과 관련하여 지난 2 년간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거기에 기본적으로 다 들어 있습니다. 대북 포용 정책의 3원칙에서부터 베를린 선언까지, 그리고 지난 1월 3일 신년사에서 말씀하신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해 남북한 국책 연구 기관간에 협의하자는 제안까지, 이 모든 제안을 저는 김대중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구상이라고 명명하고 싶습니다. 한반도의 정전협정을 평화 협정으로 전환하는 데는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하나는 남북한의 노력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국제적 차원입니다.

우선 남북한 차원에서 보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기본합의서를 이행 실천하면, 다시 말해 남북기본합의서 제5조를 실천 이행하면, 남북 평화 조약은 필요 없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 남북기본합의서 제5조의 실천 이행을 촉구할 필요가 있으며, 남북기본합의서에 명시된 4개의 공동위원회를 가동해야 할 것입니다. 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당사자 원칙에 따라 남북평화협정을 체결하자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가 아닌 것 같습니다.

두번째 경로는 국제적 차원에서 4자회담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도 그렇고 우리 정부도 그렇고 4자회담을 다소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 듯한데, 정전협정은 다자 회담이기 때문에 정전

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것도 다자 협정의 형태를 띠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틀 속에서 남북한과 미국 · 중국이 전반적인 문제, 예컨대 북측이 주장하는 북미 평화협정과 남측이 말하는 남북평화협정, 그리고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자 협정의 형태인 4자간의 평화협정을 통해 영원히 전쟁이 없는 한반도를 만들자고 제의한 적이 있는데, 이번 정상회담에서 대통령이 4자회담을 활성화시킬 것을 제안하고 그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그 후속 조처로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 정착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갑자기 평화조약을 맺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정상회담의 기본 목표는 남북간 상호 체제를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남북 관계를 공존 공영의 협력 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남북 관계의 정상화를 추진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쉬운 문제부터 풀어나가야

미국이 의제에 포함할 것을 바라는 핵과 미사일 문제, 대량 살상 무기 문제 같은 것을 의제로 내세울 경우, 예상되는 북한의 반응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그러한 문제를 의제로 올린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남북정상회담을 깨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미국에서 주장하는 것을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며, 그러한 의도가 없다면 한미공조체제의 바탕 위에서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쉬운 의제부터 풀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경제 협력과 이산가족 문제에서 우선적으로 합의를 도출해내야 할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만남 그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말씀하였는데,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한 공존 공영의 협력 관계가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제공동체가 이루어질리 만무합니다. 순서를 밟아야 합니다. 7 · 4남북공동성명이나 주한 미군 철수 문제같이 민감한 문제는 정상회담에서 논의는 할 수 있겠지만, 협상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쉬운 것부터 해나가자는 데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다음으로 상호주의 원칙은 분야별로 신축성있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호주의 원칙을 주고받는 식으로 자꾸 해석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비료 20만 톤을 지원하는 것도 다른 것과 연계시키지 않고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산가족 문제는 대북 경제 협력과 직접적으로 연계시키기 보다는 인도적 차원의 문제로서 적십자 기구와 민간 단체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대규모 경제 지원이나 SOC 지원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상호주의 원칙을 신축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농업 구조 개혁을 지원하는 대신, 농업 분야의 기초 자료 조사 공동 연구 등을 추진하고, 석탄을 제공하는 대신 경의선 철도 연결을 제안하는 식으로 분야별로 신축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장달중: 나중에 보충 토론을 듣기로 하고, 이어서 김기환 회장께서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제가 정부에 있지는 않지만 만약 정부에 있다면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데 초점을 두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남북정상회담을 수용한 북한의 동기가 무엇인가 하는 것부터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북한이 그 전에는 정상회담을 받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상대적으로 순조롭게 받아들인 동기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은 긴장 완화

첫째, 북한 경제 사정이 아직도 굉장히 나쁘다는 사실입니다. 식량 문제는 위급한 상태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하지만, 북한 경제는 외부의 도움없이는 회복 불가능하다는 게 맞는 판단인 것 같습니다. 두번째는 장달중 교수의 지적대로, 우리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햇볕 정책에 대해 북한이 신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러한 신뢰를 북돋아준 게 바로 베를린 선언입니다. 저는 베를린 선언을 북한의 사회간접자본에 남한이 지원할 용의가 있다, 그 대신 남한이 원하는 비경제적 분야에서 협조해달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학자들이 제기하는 가설이 하나 있는데, 그것도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북한이 지금까지 미국 중심으로 협상해왔는데, 그 결과가 아직 신통치 못하니까 그럴 바에는 남한과 바로 직접 한 번 해보자, 그렇게 하면 미국에 대한 협상력도 늘지 않겠는가 하는 계산도 다소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루어진 이번 정상회담에서 과욕이나 지나친 기대를 해서는 안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얻고 싶은 게 뭐냐 하는 것을 정리해보면, 무엇보다 긴장 완화를 제일 원할 것입니다. 긴장 완화란 우선 서로 긴장되는 일이나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한 걸

음 더 나아가 냉전체제를 해소하고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이겠지만,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평화 정착까지 가지는 않고 서로 긴장을 풀겠다는 정도의 합의는 원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두번째로 우리 정부가 제일 필요한 것은 당국자간 회담 재개라고 하겠습니다. 당국자간에 회담이 없으면, 긴장 완화나 관계 개선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당국자회담은 중요합니다. 또 김대중 대통령의 평양 방문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에 오는 것도 우리측이 바라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이산가족 상봉 기회의 확대는 국내 정치적으로나 인도적 차원에서나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 북한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우선 긴장 완화에 대해서는 주한 미군 철수 등 북한이 까다로운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국자회담의 재개에 대해서는 북한이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북기본합의서에 자기네들이 서명해놓고 이제 와서 그것은 없었던 것으로 하자는 그런 태도는 취하지 못할 것입니다. 다만 어떠한 이유를 댈 것입니다. 그동안 남북기본합의서가 이행되지 못한 책임을 우리측에 전가시키고자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정일의 서울 답방 역시 북한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2차 정상회담을 평양에서 하자는 것은 말이 되지 않으며, 김정일도 자신에 대해 상당한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그에 대한 대가가 크면 북한이 응해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형식에 있어 상호 방문까지는 북한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 북한은 과거 어느 때보다 큰 규모의 경제 지원을, 그것도 가급적 빨리 일시불로 지원해줄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카드는 경제 원조

그러면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 카드의 제약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 우선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장 큰 카드는 경제 원조입니다. GDP 기준으로 남한의 경제 규모는 북한에 비해 20 배는 충분히 될 것이기 때문에, 경제 원조를 할 수 없다고 말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또 하나의 카드는 우리의 우방이 앞으로 대북 정책을 어떻게 전개하느냐에 대해 우리가 상당히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현 정부의 햇볕 정책에 대해 우방국들이 모두 지지해왔는데, 그 지지 기반을 이용하면 앞으로 북한과 협상할 때, 우리는 우방국의 상당한 협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두 카드에는 상당한 제약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장달중 교수의 지적대로 우리가 지금 IMF 위기를 아직 완전히 빠져나온 것도 아니고, 또 IMF 위기를 통해 우리부터 대외 부채가 많습니다. 또 우방을 동원하는 데 있어서도 그것은 우방의 이해와 우리의 이해가 맞는 선에 해야지, 맞지 않는 선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카드를 쓰기 위해서는 우방에 대해 사전 협조를 얻어내야 할 것입니다.

보다 큰 제약은 국내 정치적으로 아직도 부담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햇볕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지지는 그동안 많이 넓혀지긴 했지만, 아직도 우리 국민들 사이에는 햇볕 정책에 대해 뭔가 의심스럽다 하는 것이 많이 팽배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과가 좋지 않으면, 정치적 부담이 우리 정부에 남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수단, 우리가 원하는 것, 그리고 예상되는 북한의 태도 등을 고려하면서, 우리가 세울 수 있는 전략을 정리해 보면, 우선 이번에는 긴장의 근본적인 해소는 바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긴장의 근본적인 해소는 차후에 있을 정상회담이나 차후에 있을 당국자간 회담으로 미루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앞으로 상대방을 서로 자극하지 않으며 남북한간의 화해를 위해 공동 노력을 한다는 정도로 성명서에서 다루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산가족 문제는 북한 정권의 안정에 관계되는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상당히 신축적인 방법을 생각해둬야 할 것입니다. 당국자간 회담 재개는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이며, 그리고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선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경제 원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시불로 큰 돈을 줄 실력도 없고 또 그런 실력이 있어도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재정이 약하고 대외적으로 돈을 빌리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통일 비용도 워낙 큰 것이어서, 우리가 모두 부담하겠다는 것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남북 관계가 당사자만의 관계가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이기도 하니까, 우방국 또는 국제기구의 참여를 확보하는 외교적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또 대북 경제 지원에 있어서도 우리가 원하는 다른 분야의 어떤 진전과 결부시켜서, 다시 말해 조건을 붙이는 식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선 순위는 지금까지 해온 대로 식량 문제 해소를 위해 비료를 추가 지원하고, 이번에 새로 할 수 있다면 베를린 선언에서 밝힌 대로 농약이라든지 종자, 농기구 같은 것을 추가로 지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우리의 경제 원조는 북한이 앞으로 무역을

신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쪽으로 연계시켜야 될 것입니다.

북한의 에너지 시설이 제일 부족하니까 에너지 시설 확충, 임해공단 조성, 경의선의 복선화 및 남북 연결, 그리고 남포 등의 항만 시설 현대화에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협 사업을 전개하려면 기구가 꼭 필요합니다.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 서로 합의한 대로 '남북경제공동위원회'의 조기 발족을 제기해서 수락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 능력이 제한적이고 또 국제 협력이 필요하니까, 한국과 미국, 일본, 중국 그리고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 여러 나라와 국제 기구가 참여하는, 어떻게 보면 확대된 케도식의 '국제북한개발위원회' 같은 것을 발족시키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달중: 여러 문제점과 해답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신영섭 논설위원께서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섭: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한국경제신문과 관계없는 개인적 견해임을 먼저 밝혀둡니다. 그동안 남북 관계는 실질적 성과없이 상당 부분 체제 유지를 위한 대내용 정치 게임이었다고 하는 불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은 우선 이런 불신을 제거하고 내부적인 합의를 유도해 내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북한 문제에 대한 냉정한 대응이 필요

둘째, 대북 관계는 이해 관계가 다른 상대방이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상당히 냉정한 대응이 필요한데, 아직도 우리 내부적으로는 이것이 안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핵무기 개발이나 미사일 수출, 북한이 그동안 추구해 온 통미봉남 전략 등 이런 것은 모두 북한 입장에서 볼 때 고도로 계산된 합리적인 전술 전략인데, 이에 대해 우리가 너무 과민 반응을 보일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리 북한 문제라 하더라도 냉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이번 정상회담도 지나친 기대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정상회담에서 당장 평화협정을 체결한다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남북 문제는 남한과 북한의 문제일 뿐 아니라, 동북아 세력 균형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주변 4강이 있는데 우리끼리 남북평화협정을 하느니 마느니 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셋째, 남북 관계는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모든 점에서 투명하고 공개적인 게임이 되어야 하며, 북한에 대해서는 일관된 신호를 보내야 할 것입니다. 남북 관계는 비밀 협상을 해야될 때도 많이 있겠지만, 최소한 공개 협

상과 병행을 해야지 비밀 협상 위주로 하는 것은 기존의 불신을 심화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많습니다. 북한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북한을 어떤 시각으로 봐야 하는가? 북한을 봉쇄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있고, 북한과 교류는 하되 상호주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점진론적 시각이 있는 데 반해, 제3의 시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북한이 통미봉남을 통해 미국과 먼저하겠다, 일본과 먼저하겠다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용인하고 기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통하지 않더라도 북한이 미국이나 일본과 관계를 개선해서 변화할 수 있다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우리에게도 좋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넷째, 대북 접근에 있어 남북 당사자가 우선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4자회담을 통한 국제적인 접근이 필요한가 하는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시각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문제는 정상회담이 출발점일지 완결편이 아니라는 시각에서 좀 더 끈기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비용 문제를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어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이산가족 상봉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경제 협력 문제입니다. 이산가족 문제는 인도적 차원의 문제일 뿐 아니라 과거의 어떤 앙금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고, 경제 협력은 북한의 경제난을 덜어줌으로써 북한 주민의 고통을 덜어준다는 인도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장차 언제 있을지 모르는 통일에 대비해서 통일 비용을 미리 경감시킨다는 미래 지향적인 측면, 그리고 남북한이 서로 이익을 얻음으로써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북 포용 정책에 대한 여론의 지지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IMF체제 하에 있는데, 우리가 과연 남북 경제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그리고 남북 경협이 우리 경제의 어떤 탈출구로서, 보다 정확히 말하면 케인즈식의 대량 수요 촉발 정책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가 하는 회의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보따리 장수식의 가공 무역 방식의 남북 경협으로는 도저히 이런 기대를 충족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대단위 직접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런 직접 투자는 기본적으로 정부간의 어떤 협조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남북 긴장 또는 대치 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정부간의 협조를 통한 대단위 직접 투자가 과연 가능할 것인가? 국제 컨소시엄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우리 정부가 자금 조달 창구 역할을 해줄 수도 있다. 통일 비용이 수백억 달러, 수천억 달러다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사실 그것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통일은 그 자체가 다이내믹한 가변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고, 생각보다 굉장히 줄어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남북 경협 내지는 남북 관계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비용을 과다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미리 걱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남북 경협의 주요 과제로서, 기업 입장에서 볼 때 위험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정부가 그 위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에게 큰 이익이 돌아가야만 남북 경협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며, 서해안공단도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정부가 강조한 북한의 SOC 확충도 가능하고, 특히 철도나 도로를 연결하고 시베리아 가스관을 연결해서 북한에 상당한 경제적 이익이 돌아가게 하는 방식이 심각하게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경원선을 연결해서 시베리아 철도를 연결한다든지, 경의선을 연결해서 중국으로 연결한다든지 하는 윈-윈 전략이 국제적 차원에도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장달중: 마지막으로 안병준 교수께서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준: 이번 정상회담은 만남 그 자체가 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과거 55 년 동안 이러한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만남 그 자체가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첫 정상회담에서 해야 할 일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긴장 완화와 평화없이 대대적인 남북 경협은 불가능

하나는 앞으로 남북 관계를 정상화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것이 당장 달성될 수 있는 것인 아니지만,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방향은 제시해야 될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 방향을 실현할 수 있는 과정을 출범시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남북 관계가 정상화할 수 있는 방향은 무엇인가, 그것은 평화와 협력입니다. 평화는 전쟁을 방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북한에서 대량 살상 무기를 억제하고 그 확산을 막는 것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북한에서 대량 살상 무기가 있는 한, 평화를 유지할 수 없고 우리 안보를 위협할 수도 있으며, 우리 우방과의 관계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향은 어떤 형태로든지 북한은 평화를 보장하고, 남한은 그에 상응해서 협력을 하는 방향으로 남북 관계가 정상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이런 것이 실현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번에 양 정상은 당장 합의를 이룰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과거 50 년 동안 지켜왔던 입장을 천명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핵과 미사일이 없는 한반도에 대한 열망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북한은 그들이 말하는 근본 문제, 즉 주한 미군 철수 문제나 국가보안법 개정 문제를 거론할 것입니다. 여기서 방향은 평화에 대한 공약이 구비될 때 우리는 협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북 관계에서 순수 경제 논리에 따라 경제 협력을 한다는 것은 지극히 바람직하지만 실현 가능성은 없습니다. 당장은 경제 협력을 먼저 하고, 신축성을 보여서 우리가 먼저 제공하고 나중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반도의 긴장 완화, 평화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한간에 대대적인 경제 협력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이 그런 것을 지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제 컨소시엄 등을 통해 수십억 달러를 지원할 수 있다고도 하는데, 그것도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나 일본, 서방국은 대량 살상 무기의 비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국제 금융 기관을 동원해서 차관을 제공한 예가 없습니다. 국민의 세금 등 공금으로 IMF라든지 세계은행을 경영하는 데, 우리가 쉽게 수십억 달러를 빌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이번 첫 정상회담에서는 이런 평화 협력 과정을 출범하는 것이 중요하며, 어려운 것은 나중에 합의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거기로 갈 수 있는 과정을 출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남북기본합의서를 가동하면 그 과정은 출범됩니다. 그런데 북한이 거기에 주저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당장에는 남북경제공동위원회를 가동한다든지 적십자회담을 통해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 합의하고, 또 이러한 협의와 대화를 상설화하기 위해 직통 전화, 핫라인이라도 우선 개설하는 등 대화와 협상의 채널, 통로를 설치하는 것만 합의하더라도 큰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만 되면 다음부터는 양측이 협상을 열어 협의하면서 상부 상조하는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협력과 관련하여 북한이 정보 기술 분야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분야에서 북한의 인프라를 돕고, 또 자금 문제와 관련하여 국내에서는 금융 개혁을 빨리 해야 할 것이며 우리도 공채 시장을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독일의 경우에도 자금 조달은 독일 재정으로 다한 것이

아니라, 공채를 발행해서 조달했습니다. 통일 비용은 우리 재정만으로는 불가능할 것이며, 또 일본이 쉽게 수십억 달러를 줄 리도 만무합니다. 그래서 국제 자본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면서 북한도 여기에 동참시켜 훈련하고 인력도 개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장달중: 지금까지 실용주의적 차원에서 남한의 목표, 북한의 목표, 과제와 실현 가능성 문제 등을 논의해왔는데, 논의의 진전을 위해 하나 제기하고 싶은 것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상당히 충격적인 변화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3단계 통일 방안과 북한의 연방제 통일 방안이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차이가 있고, 북한의 연방제 방안이 주한 미군 철수라든가, 국가보안법 철폐 등 '근본 문제'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접근은 어렵겠지만, 통일 방식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는 접목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북한이 주장하는 '자주성'을 어떻게 볼 것인가?

다음은, 이번에 북한이 경제적 · 실리적 차원에서 정상회담을 수용했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거의 이의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근에 발표된, 탈북자 인터뷰 결과를 보니까 이들의 인식에 차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컨대 주체사상의 내면화 수준이나 김정일에 대한 평가 등등이 극에서 극을 달리고 있습니다만, 단 하나 이들이 공통적으로 북한에 대해 자신있게 말하는 것이 바로 자주성입니다. 북한 사람들이 어디다 내놓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자주성입니다. 정상회담 합의 이후 이번에도 북한은 자주성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데, 이번 정상회담에서 자주성 문제를 어떤 형태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남북 관계에 상당한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경협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되겠는데, 지금까지 정부에서 내놓은 자금의 소스는 크게 세 가지 정도, 즉 남북 경협 기금, 국제 기구를 통한 자금 조달, 일본과의 수교에 따른 대북 경협 자금 또는 배상금 등입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어느 것 하나 쉬운 것 같지 않습니다.

일본의 대북 배상금의 경우, 일본이 걸프전 때 130억 달러의 지원금을 내놓았습니다. 일본은 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소비세제도를 도입하려고 노력했는데, 정권이 흔들릴 정도였습니다. 지금 일본의 재정 적자가 엄청납니다. 지금으로서는 일본이 북한에 돈을 주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토론을 이렇게 정리하고, 계속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곽태환 원장께서 오늘 있은 대통령의 말씀을 포함해 보충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태환: 안병준 교수의 지적대로 이번 정상회담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방향 제시라든가 여러 가지 과정에 대한 것을 합의해서 공동성명에 담아낸다면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성공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국제 컨소시엄 구성이나 자금 조달 문제 같은 것은 중장기적인 문제입니다. 북한이 갑자기 SOC 지원을 받아들일 이유도 없습니다. 북한이 체제 위협을 느낀다면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지도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번 정상회담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고려해주었으면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핫라인 설치입니다. 물론 공동연락사무소 같은 것도 있지만, 그보다는 김정일 사무실과 청와대 사이에 핫라인을 설치 가동하면 그 자체가 평화 과정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경제 협력과 관련하여, 남북경제공동위원회와는 별개로, 김대중 대통령이 신년사에 말한 남북 국책연구 기관간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여기서 경제 협력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만남 자체에 의의가 있다

오늘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절대 욕심 내지 않겠다, 만남 그 자체가 커다란 의의가 있다, 실용주의적 접근을 하겠다, 정상회담을 성공으로 끝내야 앞으로 남북 관계를 발전시켜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북한이 정상회담을 수용한 이유, 그리고 대북 협상을 위해 한미공조체제의 공고화를 강조하셨습니다. 핵과 미사일 문제는 논의는 할 수 있겠지만, 협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대통령께서는 베를린 선언에 있는 4 개의 의제를 말씀하셨으며, 상호주의 원칙은 홍보가 부족한지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 적극적인 태도 등을 볼 때 자신감을 갖고 대화에 임할 수 있겠다,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김기환: 모든 거래는 상호주의 원칙에서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회담을 하지 말자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상호주의 원칙은 넓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번 회담에서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경제 원조이고, 우리가 받아낼 수 있는 것은 주로 비경제적 분야입니다. 그래서 비경제적 분야에서 북한이 상

당히 합의해오면, 우리가 경제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된다 이런 정도로 상호주의 원칙을 생각해야지, 분야별마다의 상호주의 원칙은 이번에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보다 넓은 의미의 상호주의 원칙 적용과 막대한 통일 비용 확보가 관건

다음은 자금과 관련하여 막대한 통일 비용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모든 비용은 상당 부분 시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급하게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고, 천천히 할 수 있다면 비용은 적게 듭니다. 또 일을 하나의 특정한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고집하다 보면 비용이 많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통일 비용을 어떻게 감당하는가는 앞으로 통일 과정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하는 문제와 상당히 관련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북한은 당장 현금이 필요하겠지만, 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경제를 회생시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를 위해 차관이나 원조 형태로만 할 것이 아니라, 북한 역시 해외 투자를 유치하는 방향으로 북한을 서서히 끌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북한이 무역에 큰 재미를 느끼고 무역을 통해 돈을 버는 습성을 기르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북한의 SOC 지원도 무역을 확대시키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장기적으로 통일 비용도 상당히 줄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북한이 햇볕 정책을 신뢰하기 시작하는 등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으니까, 국책 연구 기관간의 협의체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 투자보장협정이나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남북경제공동위원회를 가동시키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달중: 신영섭 논설위원이 통일 비용에 대해 너무 계산적으로 하지 말자는 중요한 문제를 제기 했는데, 지금 대학에서는 통일 비용을 제대로 계산하지 않고 통일에 접근할 경우 제3세계를 또 하나 북한에 만들어놓을 것이다, 구동독 지역이 아무리 구서독 지역을 따라 온다 해도 구서독과 구동독간의 심리적 격차, 다시 말해 구동독 사람들이 느끼는 열등 의식, 제3세계 의식이 상당히 심화되어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우리의 통일 과정에서 더욱 심화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통일 과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논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영섭 논설의원이 말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코멘트를 부탁합니다.

신영섭: 사회주의권이 몰락하자 80년대 말에서 90년대 초에 굉장한 기대가 있었으

나, 구 동서독 통일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보고서 그 반대로 통일 자체를 꺼리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통일 비용이라는 것은 엄격히 말하면 통일 과정에서 정부가 부담하는 비용에 국한해야지, 민간 부문의 대북 진출에 드는 비용까지 다 통일 비용으로 포함한다면 그것은 굉장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민간 부문에서 북한 진출에 드는 비용은 수익을 얻기 위해 지출하는 투자 개념으로 보아야지, 비용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통일 비용은 통일이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에 따라 편차가 클 것입니다. 가령 구서독이 통일과 통일할 때, 화폐 교환 비율을 달리했다면 어떠했을까요, 또 독일 법체계상 불가피했다고 하지만, 독일의 재산에 대해 구서독에 거주하는 사람의 재산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어떠했을까요? 통일 비용은 굉장히 달라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북한이 비이성적이거나 불가측하다고 보아서는 안된다

추가로 말한다면, 이번 정상회담은 최소한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논의의 시발점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거창한 어떤 공동선언문 하나 발표하고 7·4남북공동성명처럼 그 다음에 끝난다면 기존의 불신에 더해져서 더 큰 실망감과 더 큰 부작용을 낳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북한은 기본적으로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경제난을 해결해나간다는 모순된 목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때문에 북한의 반응이 굉장히 복잡하고 때로는 모순되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한 북한의 반응이 비이성적이거나 불가측하다고 보아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은 대단히 합리적인 반응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과거의 김영삼 정부 때처럼 거기에 같이 편승해서 감정적으로 오락가락 대응해서는 곤란합니다. 그런 점에서 냉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지금으로서는 대규모적인 남북 경협이 불가능하다 데 동의합니다.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핵이나 미사일 같은 것은 매우 싸게 먹히고 효과적인 카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최소한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북한이 ADB에 가입하거나 국제 기구에서 돈을 빌리려고 하면, 기본 전제가 미국의 테러국 지정이 해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되려면 핵이나 미사일 문제에서 북미간에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것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핵 문제만 하더라도 과거에 얼마나 위기가 고조되었습니까? 하지만 제네바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미사일 문제도 북한으로서는 양보의 대가로 최대한 이익을 얻어내고자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끌고 여러 가지 수를 쓰겠지만 어차피 양보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북한도 경제적 실익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며, 그래서 결국 이번에 정상회담도 수용한 게 아니겠습니까? 과거 십몇 년 동안 역대 정권이 꾸준히 추진하였지만 이루지 못한 것, 즉 정상회담을 이제 한다는 것은 북한이 변화한다는 증거입니다. 물론 냉정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겠지만, 북한에 대해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장달중: 긍정적인 시각에서 북한이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변화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현재 그러한 변화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남북 관계가 돌파되지 않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인 듯합니다. 마지막으로 안병준 교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준: 저는 긴 안목에서 하나의 과정으로서의 한반도 평화, 또 과정으로서의 통일은 시작됐다고 봅니다. 북한에게 있어 핵과 미사일은 자기 생존을 위한 최후 방어 수단이기 때문에, 북한은 그것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미국이 시도하고 있는 것은, 북한이 미사일통제체제에 들어와서 일정한 사정거리 이상의 미사일을 수출하지 말고 국제 규범과 규칙을 지키는 방향으로 포용하자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미국도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의도

또 테러와 관련해서도 미국의 입장은 북한이 공식적으로, 적어도 서면으로 테러를 포기한다고 하는 성의를 보인다면 테러리스트에서 빼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북한에 모욕을 주자는 게 아니라, 공약을 조금씩 받아냄으로써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끌어내겠다는 것입니다. 경제 협력과 관련해서 북한이 원하는 것은 물론 현금인데, 우리가 현금을 줄 수 없다면, 다른 방법으로 북한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가령 북한이 갖고 있는 양질의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해 보세 가공이나 무역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경제 협력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달중: 장시간 동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현대경제연구원과 한국경제신문사가 공동으로 주최한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경제공동체 토론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특히 이런 기회를 통해 전문가들의 견해를 공유하고 수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다시 한 번 현대경제연구원과 한국경제신문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